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47
----------	------

2021년 3월 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3. 황인구 의원 외 30명 공동발의
- 나. 회부일자 : 2021. 3. 3.
- 다. 상정 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1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구금 등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함.
 -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서울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이듬해까지 계속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인권·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촉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포함과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복귀를 요구하

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
지를 가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 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
장, 외교부 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중단,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복귀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통해 미얀마 민주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민주주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투표에서의 평등,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 등의 제도적 요건을 토대로 일반 시민이 통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치체제이며,¹⁾ 쿠데타는 한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 선동이나 강권력을 활용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확산은 새뮤얼 헌팅턴이 말하는 세 차례의 물결로 이해할 수 있음.²⁾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전후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보통·평등 선거권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났고, 두 번째 물결은 전간기 파시즘과 나치즘의 등장으로 후퇴했던 민주주의가 연합군의 2차 대전 승리로 부활한 과정을 일컬으며, 세 번째 물결은 공산 정권과 군부 권위주의 치하에 있던 남·동유럽, 남미,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크게 확산된 과정을 말함.

1) 로버트 달, 『민주주의』 (동명사, 2018).

2) 새뮤얼 헌팅턴, 『제3의 물결 :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인간사상, 2011).

- 제3의 물결 이후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받는 듯 했으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부상,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장기 집권, 2010년대 ‘아랍의 봄’으로 대표되는 중동지역 민주화 운동의 좌절 등으로 후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최근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2010년 부활한 미얀마 민주주의가 10년 만에 다시 군부 권위주의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여러 나라 지도자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음.
- 군부 권위주의 집권과 민주화 투쟁으로 중심으로 하는 미얀마 주요 정치 사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³⁾
 - 1948. 01: 영연방으로부터 독립
 - 1962. 03: 네윈 육군총사령관, 쿠데타로 우 누 총리 축출, 정권 장악
 - 1988. 03: 반정부 민주화 시위 ‘양곤의 봄’ 발생. 아웅산 수지 시위 참여
 - 1988. 07~09: 소우 마웅 장군 쿠데타로 집권, 반정부 시위로 3천여명 사망
 - 1989. 07: 민족민주연맹(NLD) 지도자 수지와 틴 우 당총재 가택연금
 - 1991. 10: 수지 여사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 2007. 08: 군정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반정부 민주화 시위 촉발
 - 2008. 02~05: 군정, 민주화 일정 발표, 국민 투표로 헌법 제정
 - 2010. 11: 통합단결발전당 총선 승리. 1주일 후 수치 여사 연금 해제
 - 2016. 03: 수지,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 취임, 측근 틴 초가 대통령 취임.
 - 2020. 11: 총선에서 NLD가 전체 의석의 59.6% 확보.
 - 2021. 01. 26: 군부, 총선 부정 의혹 조사 요구하며 쿠데타 가능성 시사
 - 2021. 02. 01: 군부 쿠데타, 수지 고문 등 정부인사 구금, 1년간 비상사태 선포

3) 연합뉴스, “[일지] 미얀마 민주화에서 군부 쿠데타 재발까지” (2021-02-11).

-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와 그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약 3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된 사태는 한국이 경험했던 군부 쿠데타, 민주화 시위와 유사함.⁴⁾ 한국 또한 1961년 5월과 197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군부 쿠데타를 경험했고, 특히 1979년 쿠데타와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이들 광주 시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항쟁과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가 가능했음.
-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서울특별시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 결의한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짐.
- 첫째,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바람과 지지를 대표하는 행위임.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서 1960년 4·19 혁명,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지지하는 핵심 무대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서울 시민들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음.
- 둘째, 본 결의안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징적 국제 연대 활동임. 한국의 민주화는 분명 민주화 운동 세력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지원과 지지, 성원이 민주화의 성공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음.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결의안은 미얀마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사 표시로 이해할 수 있음.

4) 뉴시스, "미얀마 쿠데타 후 약 30명 사망·1132명 체포"(2021-03-01)

- 셋째,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미얀마의 주요 도시 양곤, 만달레이 등과 도시간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장을 신설해 국제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음(제10장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현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주체로 하여 미얀마 철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쿠데타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붙임 1 참조). 그러나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될 경우, 본 결의안은 양국 시민들 간의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 하며 향후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서울과 미얀마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 촉구 관련 활동으로는 광주광역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성명’ 발표(2021. 2. 24.), 경기도지사의 ‘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2021. 3. 2.), 창원시의회의 ‘미얀마 쿠데타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2021. 3. 3.) 등이 있음.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구금자 석방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서울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대표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징적 국제 연대 활동이며, 향후 미얀마 주요 도시와 서울 간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미얀마 사업 현황(1건)

사업개요

- 사업명 : 미얀마 철도 역량강화 사업
- 사업내용
 - 철도 교육훈련센터(실습장 포함) 신축 및 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수립
 - 철도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포함)
 - 신기술 기자재 공급(운전 연습기, 신호 시스템 및 궤도 기계화 장비 및 이러닝 장비)
 - 철도 전문교관 및 운영관리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 발주기관 : 코이카(KOICA)
- 추진주체 : 서울교통공사
- 시(교통공사) 역할 : 전문가 파견을 통한 사업 관리, 철도 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이러닝 콘텐츠 바탕) 등

추진경위

- '19.6 코이카 조사 요청에 따라 교통공사 전문가 1차 현지조사
- '19.10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2차 현지조사(교통공사, 민간 참여)
- '20.1 수원국(미얀마)에서 사업기획서 외교부(코이카) 제출
- '20.3 코이카 '21년 추진사업 선정
- '20.12 국회 예산 심의 및 추진 확정

※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21.2.1.)로 현지 동향 모니터링 후 추진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23일

발 의 자 : 황인구, 강동길, 경만선,
권순선,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인호,
김정환, 김종무, 김혜련,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송재혁, 신정호,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정진철 의원(31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구금 등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함
-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서울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이듬해까지 계속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인권·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를 가택연금 또는 구속하며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정을 장악했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을 발포하여 폭력으로 진압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활동가나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야간에 납치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20일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에서 무장군인의 발포로 10대 소년 2명이 사망하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Yangon)에서도 군경의 야간납치행위를 막으려던 1명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숨지는 등 계속해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유혈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1962년 이후 50년 이상 무력을 앞세워 온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1988년 ‘8888 항쟁’ 과 2007년 ‘사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각 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군사지도자에 대한 재제조치를 공포한 바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미얀마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회 또한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을 둔 미얀마 시민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군부의 원대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21.2.3. 발의, 이원욱 의원 등 14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21.2.4. 발의, 박영순 의원 등 54인)」,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21.2.19. 발의, 정진석 의원 등 25인)」을 발의했다.

우리 서울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도시로서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품고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이듬해까지 계속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토 곳곳에서 넘쳐흐르던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서울에 모여 제도와 역사가 되어 왔듯 이제 서울은 모범적인 인권·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에 가슴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